

찬반 팽팽 광주전남연구원 ‘재분리’ 오늘 판가름

이사회 3분의2 찬성시 분리 시도, 새 법인 등 분리 기조 시민단체·노조 “시대 역행”

찬반이 팽팽한 광주전남연구원의 재분리 여부가 27일 판가름 난다. 26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전남연구원은 27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연구원 재분리 안건을 논의한다. 임시이사회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분리 의견서와 함께 지난 16일 각각 진행한 공청회 결과를

제출하면서 열리게 됐다. 이사회는 시도 기획조정실장 등 당연직 5명, 선임직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연구원 정관상 재직 이사 3분의2 이상 찬성할 경우 연구원은 분리 운영된다. 분리 운영으로 결론나면 이후 시도 의회가 연구원 설립·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지난 2015년 민선 6기 당시 광주·전남 상생 1호 사업으로 통합된 연구원은 지난해 10월 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의 시정질문에서 강기정 시장이 분리 의견을 내놓으면서 재분리 논란이 점화됐다. 현재 광주전남연구원 노조와 나주시, 나주시의회 등은 재분리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인구소멸 등 공동위기가 있음에도 시도가 따로 대응하는 것은 정치적 퇴행이라고 주장하면서 초광역 협력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광주전남연구원이 제 기능을 못한다’면 객관적으로 면밀히 진단하고 주어진 여건에서 해결방안을 찾아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도 표명했다. 연구원 노조는 지난 23일 낸 성명에서 “연구원을 재분리할 것이 아니라 연구의 독립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갖춘 역량있는 통합 정책연구기관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자세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역 시민단체도 최근 성명을 통해 공청

회 개최 5일 만에 재분리 의견을 제출하고, 열흘 만에 이사회를 통해 속전속결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재분리를 찬성하는 쪽은 민선 8기 들어 생활 환경이나 산업구조가 다른 광주와 전남의 정책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광주와 전남의 이해관계가 엇나간 군공항 이전, 나주SRF 등 문제에 대해 명쾌한 방안을 찾지 못한 점과 2015년 통합 이후 실질적 통합과제 수가 적다는 점 등도 이유로 꼽았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연구원을 발전적으로 분리해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연구 등으로 장점을 극대화하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기본 법인을 승계한 명칭 변경을,

광주시는 새로운 법인을 신설로 가닥을 잡고 있다. 최근 열린 공청회에서 배일권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기초발제를 통해 “연구원을 분리하면 지도감독 일원화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며 “광주의 미래를 선도할 시정 핵심 연구기관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분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현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연구원과 협의해 지역특화 종합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겠다”며 “분리될 경우에도 지속 가능한 상생연구 방안을 마련해 일부에서 제기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 /최근산 기자



복지협치위원회 출범식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24일 오후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제3기 복지협치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함께 비전선포를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전남도, 내년 국비확보 ‘선제대응’

정부부처와 한발 빠른 소통 박창환 부지사 등 ‘총력전’

전남도가 2024년 정부 예산안 편성을 위한 중앙부처의 본격적인 예산 심사를 앞두고 선제

적인 국고 확보 활동에 나섰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 총사업비 11조9,849억원 규모의 신규사업 111건을 발굴해 기획재정부와 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사업을 적극 건의했다. 3월부터는 박창환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실국

장들이 기재부 예산실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 차관과 실국장들을 만나 국고 현안사업 건의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예산편성 순기에 따라 4월 말까지 소관부처에 건의사업을 신청하는 점을 고려

해 부처별 예산 심사에 앞서 정부정책 방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논리를 보완, 정부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전략이다. 박창환 부지사는 지난 24일 박종원 산업부지 역경제정책관을 찾아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준은 지역 차 최대 지원액이 같고 시도 간 균형발전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등 지방투자 유인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보조금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지역나후도지수 등 균형발전 지표를 반영해 차등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이원재 국토부 1차관에는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을,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는 ‘영농태양광 지원법’ 조기 제정 등을 건의했다. 박 부지사는 오는 29일 해수부 윤현수 해운물류국장, 이수호 항만국장을 만나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조기 안착을 위한 목표신항 2단계 항만배후단지 및 철재부두 조기 조성 등 기업 입주 임대로 감면을 요청한다. 이운상 국토부 철도국장을 만난 자리에선 호남선의 출발지인 목포역의 노후 역사 개량 및 철도 재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전남도가 건의중인 주요 국고 현안 신규사업은 ▲AI(인공지능) 첨단 농업 융복합지구(농생명밸리) 조성 ▲광주·전남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 ▲술라시도 탄소중립(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신속 추진 ▲그린수소 저장·운송 핵심 인프라 구축 등이다. 전남도는 정부 예산안 심의단계에서 기재부와 중앙부처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정근산 기자

“5·18피해자 5년마다 실태조사” 조오섭, 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사진)은 26일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헌정 질서 파괴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다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등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갈수록 고령화되면서 이들에 대한 실태 파악이 미흡하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보상금, 의료지원금, 상담프로그램을 규정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사회·경제적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피해 당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정책을 강화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그동안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생활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지 않아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www.518run.com

5·18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

23회 5·18 마라톤대회

일시 2023. 5. 20 (토) 집결 08:00 출발 08:30

장소 광주 승촌공원 운동장 (승촌보 내)

종목및참가비 > 5.18km 10,000원
10km, 하프코스 30,000원

접수기간 > ~ 2023년 4월 21일(금) ★현재접수중★

접수방법 > 전화, 팩스, 518run.com, 0518run@hanmail.net

문의 > TEL (062) 720-1099, FAX (062) 720-1020 카카오톡 ID : jndnnews

주최 518기념재단 전남매일

후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 대한체육회 광주광역시체육회 골드클래스(주)